

여성회관의 기능 활성화 방안

김혜란*

〈국문초록〉

여성정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의 거점이 되는 여성회관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앞으로의 여성정책의 실현을 위해 여성회관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하고, 어떠한 패러다임이 새롭게 필요한가를 모색해 보았다.

여성회관에서의 현재의 기능을 활용하여 평생교육기능, 복지전달체계 기능, 자원봉사기능의 통합적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기능의 통합과 네트워크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 관리를 통합적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여성회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내외적 자원의 개발과 협조가 필요하며 이들의 코디네이터의 역할 수행을 여성회관이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여성회관의 기능합리화를 위해서는 외적 자원으로는 지역 단위 행정의 협조, 중앙행정의 제도적 법적 정비와 지원 등의 도움이 필요하며, 내적 자원으로는 민·관 협력 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할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여성회관, 여성정책, 여성복지, 평생교육, 자원봉사

* 주성대학 복지행정과 교수
hrkim@jsc.ac.kr

『젠더와 문화』 제2권 2호(2009): pp.57-78
© 2009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의 거점이 되는 곳이 바로 여성회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여성회관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회관의 기능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아직까지도 기초자치단체의 여성회관의 경우는 여성교육의 대부분을 여가선용 및 교양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단순한 생계보장형 직업교육만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생긴다.

많은 연구들이 여성의 교육은 궁극적으로는 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이나 환경보호운동 등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하고 이를 통한 실질적 수요를 수렴하는 시민교육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앞으로의 여성정책의 실현을 위해 여성회관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하고, 여성의 평생교육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모색해 보도록 한다.

2.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일생에 걸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은 여성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한 패러다임으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먼저 여성의 평

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이 어떻게 여성정책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여성회관의 기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여성의 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의 정책전략은 궁극적으로 지식사회의 자원이 되는 평생학습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는데 있다. 평생학습인은 스스로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지식의 주체로서의 학습인이며 동시에 자신의 학습할 바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인으로서의 학습인이자 학습방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학습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되는 것은 스스로 학습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학습의 능력을 지닌 평생학습인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생교육은 자원봉사활동과 매우 밀접한 개념적, 활동적 측면을 공유한다. 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과의 관계는 다음의 관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2000: 45-46).

(1) 자원봉사활동은 자기계발, 자기실현과 연결되는 자기학습이라는 관점, (2) 개인의 자기계발과 자기실현이 이웃과 지역공동체로 그 영향과 파급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참여의 관점, (3) 자원봉사활동 실천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활동과 교육성과를 증진하고 심화시키는, 평생교육의 실천과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는 관점, (4) 여성의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의해 평생교육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의 종합추진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센터, 청소년교육시설 및 수련시설, 여성교육시설, 교육위원회 등을 거점으로, (1) 지방자치단체 내의 자원봉사 사업에 관한 연락 및 조정, (2) '활동의 장'을 유기적으로 개발, 연계, (3) 정보제공 및 상담사업의

활성화, (4) 자원봉사자양성 교과목 개발, (5) 자원봉사자 양성/연수사업, (6) 평생교육 자원봉사센터 개설 등의 사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¹⁾

2) 자원봉사활동의 영역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은 활동의 대상, 활동의 장, 과업의 성격, 개입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진다.

먼저 활동의 대상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자를 주로 대상화 할 수 있지만 엄밀히 자원봉사활동은 대상에 있어 제한적이지 않고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괄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활동의 장 역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 나아가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과업의 성격은 직접적 원조, 예방적 활동, 전문적·일반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예방적 활동과 전문적 활동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봉사참여자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해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의 선택을 개방하는 추세이다.

성의 불평등, 문화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등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교육적 해방'을 의미한다. 또한 평생교육은 모든 이들의 학습권을 실현하여 지식사회·정보사회의 진정한 주체가 되도록 하는 실질적 힘을 부여한다. 즉, 학습권의 보장과 이에 대한 학습권의 신장이 토대가 되어 모든 개인들이, 급격히 전이되는 지식사회·정보사회를 주도하고 국가적·사회적 결속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 주요 기제가 된다. 즉, 평

1) 1992년 일본 '생애학습심의회'의 답신은 자원봉사활동은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 생애학습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을 통해 인간은 (1) 평생학습의 성과를 ‘개인의 경력 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2) 평생교육의 성과를 사회참여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 활용할 수 있고, 아울러, (3) 평생교육의 성과를 ‘지역사회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자원봉사활동을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교육활동 자체로 평생에 걸쳐 배우고 실천해 가야 할 개인과 사회의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첫째, 평생교육 및 학습의 성과를 여성 개인의 평생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러한 정책을 초·중등교육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규교육과정 이후의 평생의 발달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둘째, 여성 평생교육 및 학습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이란 구체적 사회 참여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이는 곧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 및 학습의 성과를 자원봉사활동이란 구체적 영역으로 포섭함으로써 현재 실시되는 사회복지, 환경보전, 청소년육성 등 사회참여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 개인의 경력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자원의 사회 환원이란 관점에서 그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다.

셋째,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의 성과를 ‘지역사회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 평생교육을 통한 ‘학력 사회에서 학습력 사회’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여성에 대한 기존의 평생교육적 관점과 영역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시킴으로써 그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즉, 여성의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 각 부분의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인적 자원에 대비되는 사회자본의 형성을 도와, 정부제도의 효과적 작동을 촉진시키고, 정치안정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청소년범죄·이혼율·미혼모 등의 사회문제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키는 데도 적절히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자원봉사활동의 유기적 연계망을 축조함으로써 지방자치회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주민의 주체성에 기반할 때, 지역사회의 과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평생학습의 내용을 보다 풍요롭게 하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내용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은 여성 특유의 유연성, 섬세함, 선구성, 기동성, 사회번역력 등과 같은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활동이다. 그래서 여성의 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의 연계는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화와 지역주민의 주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²⁾

3) 여성평생교육기관 및 자원봉사활동기관의 정보 네트워크 구축

(1) 여성평생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성

광역지자체 내의 여성평생교육기관간의 사업 중복성이나 정보교류 제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평생교육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협의체는 매년 사업방향이나 프로그램, 강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상호조정을 통해 사업 중복을 피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여성평생교육을 이끌어간다.

2) 여성자원봉사활동은 지금까지 그 내용이 협소하고 전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제한된 모습을 보여 왔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고 환경보존, 사회제도 개선을 향한 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으로 확대가 요구된다(한옥자, 2000: 20). 여성계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단순한 노력봉사의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여성의 보조적 역할화의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광의의 평생교육과의 연계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을 정립할 때, 그것은 여성의 평생의 경력개발과 자신의 경력을 지역사회 속에서 실현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활동이 될 수 있다.

여성교육정보센터와 교육상담센터들 사이에 연계망을 구축하고 특히 실무자들 사이의 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여성평생교육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온라인 상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온라인상의 평생교육이나 이동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여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는 프로그램에 관한 각 기관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교육대상자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직업교육기관, 취미/교양 교육기관 등 교육의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 및 권역별 네트워크 구성이 취업관련 교육기관 및 취업 정보센터의 네트워크 구성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정보 종합유통관리 시스템이나 여성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지역별 모든 여성교육기관과 여성학습자들이 일생에 걸친 정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평생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하다.

(2) 여성평생교육기관과 자원봉사활동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성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수요/공급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과 함께 이를 여성의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해주는 네트워크 구성을 모색해야 한다.

자원봉사 교육을 위한 기관 및 강사 등에 관한 네트워크 구성이 여성의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물적·인적자원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제간 접근방법의 입장에서 각 지역 내의 평생교육, 정책, 여성, 자원봉사활동 등의 관련 전문가, 교수, 사회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여성평생교육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교육자료와 강사 등에 대한 자문과 평가 등을 받음으로써 협의의 개념이 아닌 광의의 여성평생교육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동시에 사회의 각 영역별 통합이 이루어진 평생여성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여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여성평생교육기관 및 자원봉사활동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성

행정부 내의 횡적인 연락협의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자원봉사센터를 정비하고 여성평생교육을 위한 협의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킨다. 정보수집제공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자원봉사센터, 여성평생교육을 위한 협의체와의 연계성을 모색함으로써 자원봉사관련 여성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회복지, 환경 분야의 프로그램 강화, 차세대의 복지교육, 자원봉사활동 등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용이해질 것이다.

이상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첫째, 여성사회교육 분야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하드웨어 확보를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지원도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여성회관 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둘째, 수강생관리, 강사관리, 회계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지원이 시급하고, 셋째,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과 더불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도 병행·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표준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시급한 과제라 보여 진다. 왜냐 하면 현재 여성사회교육기관 등은 인력 및 재정 등의 한계로 비효율적인 관리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정보화시대에 맞는 교육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역에서의(수강생관리, 강사관리, 재정관리 등)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국의 모든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프로그램별 수강생 추이 및 특성 등도 지속적으로 취합, 분석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여성사회

교육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여성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할 것이라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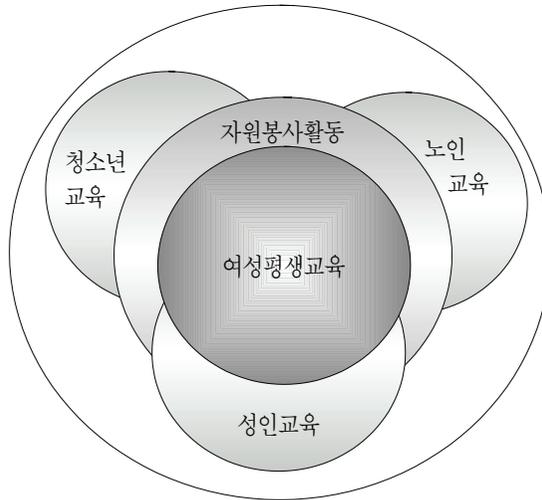
한편, 여성사회교육정보 DB화 및 확대개발도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여성사회교육정보 DB가 구축·운영되고 있고, 이곳에서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여성단체, 생활과학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전국 1,600개소의 기관현황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강사 현황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메뉴의 다양화, 사용자 검색기능의 강화, 우수사회교육기관의 사용자 추천 등 참여 콘텐츠를 신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다양한 욕구충족 등 DB 효용성 제고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여성과 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의 연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여성의 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의 종합추진을 위해서는 현재는 평생교육센터, 청소년교육시설 및 수련시설, 여성교육시설, 교육위원회 등을 거점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는 여성회관을 거점으로 통합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으로는 (1) 지방자치단체 내의 자원봉사 사업에 관한 연락 및 조정, (2) '활동의 장'을 유기적으로 개발, 연계, (3) 정보제공 및 상담사업의 활성화, (4) 자원봉사자양성 교과목 개발, (5) 자원봉사자 양성/연수사업, (6) 평생교육 자원봉사센터 개설 등이 있다.³⁾

청소년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중 여성이라는 공통분모를 갖는 여성평생교육과제를 구체화하여, 역시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광의의 자원봉사활동을 개념화하는 최근의 추세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앞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여성평생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1992년 일본 '생애학습심의회'의 답신은 자원봉사활동은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고 생애학습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1〉 여성평생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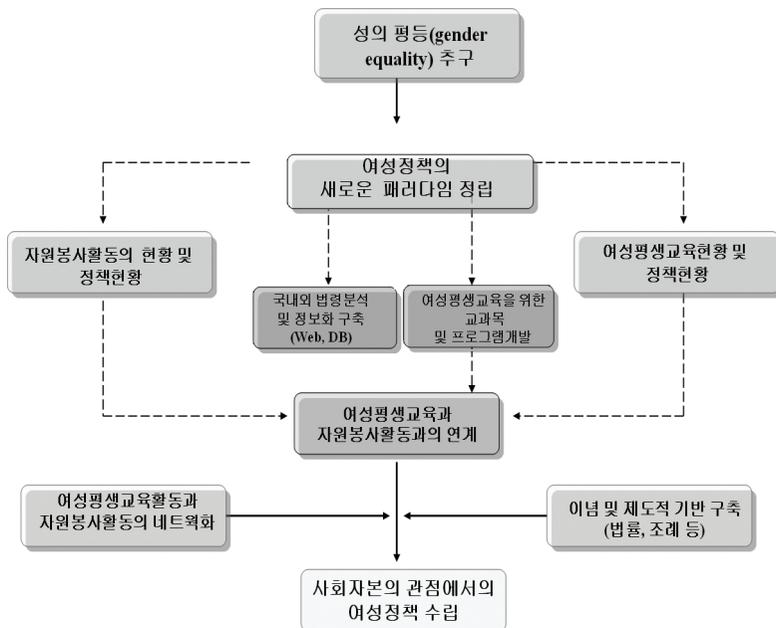
기존의 여성정책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방법에, 교육학적 접근방법과 자원봉사활동간의 연계를 위한 정책학적 접근방법 및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방법이 보완된 학제간 접근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여성회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이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내외 법령분석 및 정보화 구축, 여성평생교육을 위한 교과목 및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여성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수립 및 제도적 기반구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평생교육 및 학습의 성과를 여성 개인의 평생 경력개발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여성 평생교육 및 학습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이란 구체적 사회참여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의 성과를 '지역사회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유기적 연계망을 축조함으로써 지방자치회의 실질적 발

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사회자본의 생성·강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평생교육 및 학습의 성과를 여성 개인의 평생 경력개발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여성 평생교육 및 학습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이란 구체적 사회참여를 가능케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의 성과를 ‘지역사회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유기적 연계망을 축조함으로써 지방자치회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사회자본의 생성·강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림 2> 사회자본 관점에서의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3. 여성회관의 활성화

여성회관은 1906년 민간기관으로 최초로 설립되었고, 공공기관으로
는 1952년 부산에 처음 설립된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광역자
치단체의 여성회관들의 경우 그 명칭을 여성발전센터⁴⁾로 개명을 한 곳
들이 많으나(서울, 광주, 충북, 전남 등), 부산이나 대전과 같이 발전연
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시·군 단위의 경우에는 여성회
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여성회관은 전국 단위의 여성종합기관이며, 저소득 모자가정을 비롯
한 일반여성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지역여성복지기관이며 동시에 지
역여성사회교육기관이다.

그러나 여성회관은 운영상의 문제점,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뒤떨
어지고 있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고, 또한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
사회교육기관 등이 계속 설치되고 있어 여성회관의 기능과 사업이 도
전받고 있으며, 여성회관 관련제도, 법 정책의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 여성회관 운영이 변화해야 하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는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김성경, 1999). 실제 서울의 경우를 예
를 들면 여성부와 서울시가 공동 관여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15
개소,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등과 같이 여성발전센터의 역할
과 유사한 기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여성발전센터
를 취업교육 전문기관으로 특화하여 수료인원대비 기술교육 및 정보화
교육, 창업교육 등 직업관련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기관으로 여성발

4)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이며,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등 총 5
개소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 여성발전센터는 1998년까지는 시 직영으로 운영
되었으나, 1999년부터는 시 직영 및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센터의 취업교육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중점사업을 직업기술교육으로 할 것인지, 취미나 교양 위주의 사회교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강화되고 있다(고혜원, 2002).

여성회관은 설치기준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관과 같이 일률적으로 설치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되지만, 여성회관의 기능과 필요성으로 볼 때 유사시설이 없는 지역의 설치에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성회관의 운영주체는 자치단체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구분되고 있다. 대도시 여성회관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사업소인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직영과 민간위탁을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성회관의 조직은 대도시 여성회관의 경우 서무계(관리계/총무계), 교육계(운영계), 상담실 3개 부서로 나뉜 곳이 많으며, 중소도시 여성회관의 경우, 서무계와 상담실 또는 서무계와 교육계의 두 부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1개 부서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군 지역은 조직이 없는 곳도 상당수 된다.

여성회관의 인력에 대해서는 각 조례에서 관장과 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의 정원과 직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관 규모에 따라 직종과 직원규모의 최저수준이 정해져 있으며, 여성회관은 이러한 배치기준이 없어 직종 및 인력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르고 있다.

여성회관의 사업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복지기능을 갖는 사업과 사회교육기능을 갖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복지기능을 갖는 사업으로는 상담사업, 여성자원활동센터 사업, 취업안내 사업, 보육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사회교육기능을 갖는 사업으로는 기술, 기능교육, 취미교양교육, 사회의식교육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그 외 기타사업으로 지역 여성단체를 위한 시설대여, 저소득층을 위한 예식장 사업 등을 들 수

있고, 복지기능에 속하는 일시보호쉼터 등도 여성회관에 설치되어 있다. 그 외 취업안내사업, 보육사업, 기술 기능교육, 취미교양교육 및 사회의식교육, 시설대여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중심으로 여성회관을 광역시/도 단위 여성회관, 시단위 여성회관, 군단위 여성회관으로 유형화한 분류가 있다. 이것은 여성회관장의 직급 간의 차이와 지방정부의 분류에 따라 잠정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실제 현황분석 결과 지역간 특성보다는 소재지별(대도시/중소도시/군)특성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여성회관의 유형별 기능 및 사업은 <표 1>과 같다.

이 유형화에 따라 충청도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충북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은 크게 교육기능, 연구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인적자원 개발을 주요업무 기능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여성·가족정책 연구,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교육시설 확충 및 보강 등이다.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는 2009년 10월말 현재 4건이 진행되었다.

- ① 충북여성의 취업욕구 분석 및 취업연계방안 연구
- ② 충북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운영 실태 및 지원방안
- ③ 성인지 정책을 위한 국제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④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총 16개 과정 11,339명의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다.

- ① 여성인적자원개발 교육과정 운영(6과정/ 105명): 3개 과정/ 169명
- ② 전문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8과정/ 180명): 5개 과정/ 504명

- ③ 의식향상 교육과정 운영(11과정/ 3,980명): 8개 과정/ 10,666명
- ④ 시·군 여성회관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2월 중

여성긴급전화 운영은 여성폭력방지 실무자 워크숍(1회)와 홍보(1,059회)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충북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유형별로 보면 『(도)B형』에 가깝다고 하겠다.

충북도 여성발전센터의 경우 앞으로의 활성화방안으로 첫째, 사회교육과 여성정책연구개발,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보급으로 시·군 여성회관 활성화, 셋째 지속적인 기능교육으로 전문기능인 양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여성회관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문제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여성전담 부서와 여성관련 부서와의 업무 연계현황과 문제점으로 협조체계 및 연계체계가 미약한 것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여성관련 업무를 규정짓는 것이 매우 힘들다.

둘째, 여성회관과 중앙부처의 지방조직간의 업무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⁵⁾

셋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여성업무의 내용 중, 특수시책사업의 경우, 사업방향 지침 및 예산지원을 해주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 다양한 여성정책 부서로 개편되어 예산지원이나 인사교류, 업무지원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영향은 여성회관의 경우에도

5) 예를 들어 여성정책 중 '여성고용 및 훈련기회의 확대'와 관련하여 '시간제 주부 활성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여성의 취업확대 방안마련'등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와 관련이 있다. 또한 '여성사회교육의 확대'와 '학교과목에 성교육 교과과정을 포함시키는 일', '방과후 아동지도 훈련프로그램의 확산', '성차별 의식교육의 확산'등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청이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간의 협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들은 3년마다 기초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상황에서 정기적인 회의나 모임 등을 통한 연계망이 전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여성의 평생교육과 복지기능, 자원봉사센터의 통합적 연계가 여성회관 내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 간 기능배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든 업무의 중복과 체계적인 여성정책의 실현장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표 1〉 여성회관의 유형별 기능 및 사업

유형화	기능	서비스대상	사업
광역 지방 정부 형	(광역시)	광역시 지역 여성	· 성폭력상담/가정폭력상담/ 청소년 성상담/긴급피난처
	· 문화기능/여성소 집단 모임지원		· 생활체육, 문화활동, 교육생/ 자원활동자들의 소집단 모임 지원사업
	(도)A형	도내 여성회관 도내 민간기관/ 여성복지시설 도내 여성사회 교육기관 도내 지역여성 여성회관	· 여성회관 직원 연수/재교육 · 여성회관 상담원/자원봉사자 전문훈련 · 조사 연구사업 · 민간기관, 단체에 대한 정보제공 연계 · 여성사회교육기관협의회 구성운영
(도)B형	· 여성복지서비스의 지역거점 역할 · 여성사회교육기관 협의회의 조직화/ 활성화 기능 · 기본 복지기능/ 사회교육기능	시내 여성사회교육 기관 시 지역 여성/민간 기관/여성복지시설	· 여성사회교육기관협의회 구성운영 · 지역여성/민간기관, 단체에 대한 정보제공, 연계 · 상담실/여성자원활동센터/ 직업안내사업/보육서비스/ 기술, 기능교육/취미, 교양교육/사회의식교육

중소도시형	· 기본 복지지능/ 사회교육기능	시지역여성	· 상담실/여성자원활동센터/ 직업안내사업/보육서비스/기술 · 기능교육/취미·교양교육/ 사회의식교육
	· 전문 복지서비스기능 /전문 기술교육기능		· 성폭력상담/가정폭력상담/ 청소년 성상담 · 전문적 기술교육 실시 (중장기 교육)
	· 여성복지서비스의 중심기관의 역할		· 지역여성/민간기관, 단체에 대한 정보제공, 연계
	· 여성소집단모임 지원		· 교육생/자원활동자들의 소집 · 단 모임 지원사업
군지역형	· 기본 복지지능/ 사회교육기능	군지역여성	· 상담실/여성자원활동센터/ 직업안내사업/보육서비스/기술 · 기능교육/취미·교양교육/ 사회의식교육
	· 여성소집단모임 지원		· 교육생/자원활동자들의 소집단 모임 지사업
	· 여성복지서비스의 중심기관의 역할		· 지역여성/민간기관, 단체에 대한 정보제공, 연계

자료: 김혜란(2002).

4. 결론

앞으로 새로운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은 지금까지의 프로그램 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남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아동 및 노인들의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 또한 지역에서의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여성회관을 커뮤니티 센터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재 행정단위인 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회관에서의 현재의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여성회관의 시설 면에서 보더라도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에 부족하지 않다. 그러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평생교육기능, 복지전달체계기능, 자원봉사기능의 통합적 패러다임의 관점(김혜란, 2001)에서 기능의 통합과 네트워크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⁶⁾

이렇듯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시도가 필요하다. 다만 이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처간(행정자치부, 여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이해를 넘어서, 효율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주민자치센터로의 동기능전환의 문제와, 여성회관의 문제점, 평생교육 및 복지·자원봉사의 문제들이 통합적 시각에서 해결 가능해진다.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여성회관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여성회관이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 독립적 커뮤니티 센터나 클럽 룬의 운영매뉴얼을 총괄하는 것이다. 지역조사의 내용과 방식,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다양한 유형의 활동방식, 자원동원과 협력관계구축 방식, 지역 내 다양한 민간단체의 유형화와 협조방식 등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한다.

둘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회관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돕는다. 이는 각 지역

6) 평생교육과 자원봉사의 통합논의는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볼런터리즘(voluntarism)을 기초로 한 복지체험학습(service learning)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2000).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군포시가 '평생학습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새로운 센터의 건립이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군포시, 2001). 그러나 기존의 여성회관을 커뮤니티 센터화하면서 평생교육기능 및 자원봉사기능을 문화·여가 기능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의 주민자치센터의 권역별 운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 개개인의 수요욕구를 확인해야한다. 특정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활동의 핵심적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지속성 프로그램과 일회성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참여의 수준과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뿐 아니라 개인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부부프로그램 등 참석단위를 복합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를 제공한다. 공적인 모임은 물론 사적인 모임(지역 내 동창 모임, 중·고등학교의 독서모임, 계모임 등)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커뮤니티센터의 공간을 클럽 룸으로 개방하고 있다(권영주 외, 2002). 이를 위해서는 각 여성회관의 건물이 영국에서와 같은 개념의 클럽 룸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의 관리를 통합적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여성회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주민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내·외적 자원의 개발과 협조가 필요하며 이들의 코디네이터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외적 자원으로는 지역단위 행정의 협조, 중앙행정의 제도적 법적 정비와 지원 등이 있으며, 내적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민·관협력 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며, 평생교육, 자원봉사 및 복지기능의 코디네이터의 역할 수행을 위해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전제가 될 때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여성회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이 가능해진다.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여성회관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기능들의 강화는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향을 같이 하면서

여성회관이 개발해야할 프로그램과 기능활용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실용적인 면을 제시한 것이다. 많은 여성회관의 경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이 동일하다하더라도, 특정 여성회관이 어떠한 사고체계에서 운영되는가에 따라 집단 및 개인으로서의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인 여성의 세력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념적 방향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여성회관의 이념적 방향에 따른 운영의 차이가 여성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시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접수: 2009. 10. 11 게재확정: 2009. 11. 10)

참고문헌

- 고혜원(2004),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의 운영형태별 성과분석”, 『행정논총』,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 권영주 외(2002),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군포시.
- 권이중, 이상오(2000), 『평생교육의 실제』, 교육과학사.
- 김미숙 외(1998), 『자원봉사센터의 현황과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란(2002), “지역공동체와 여성”,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_____(2003), “사회자본관점에서 본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연구”, 『주성논문집』.
- 박진영 외(2009), “지역 평생교육에서 비영리민간단체와 공공기관 협력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제17권 제1호, 99-119쪽.

- 박희봉, 김명환(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제34권 4호.
- 이재희(2001), “여성정책의 주류화”, 한국정책학회발표논문.
- 주성수(2000),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한양대학교출판부.
- 최창수(2000),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미국의 교훈”, 『한국지방행정연구』, 14(1), 213-230쪽.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2000), 『일본의 교육개혁과 불런티어교육의 동향에 관한 연구시찰보고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 한준상 외(1998), 『평생교육의 21세기 장기발전과 비전을 위한 전략모형연구』, 교육부.
- 한옥자(2000), 지역여성자원활동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의 여성자원활동 사례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 논문, 충북여성포럼.
- Fisher, James and Cole, Kathleen(1993), *Leadership and Management of Volunteer Programs*,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관리와 리더십』, 유성호 옮김,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8.
- Uhm, Joon-Yong, Huijung Chu(2009), Lifelong Learning System in Finland: Implications for Korean MHRD Policy, *Korean Journal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11(1), pp.120-157.

<Abstract>

A Study on Vitalization of Functions for Women's Centers

Hye-Ran Kim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evive the functions of women's centers. Many studies have pointed out that education for women would eventually continue as a form of civil education integrated into lifelong education, volunteer work, and environmental movements. From this point of view, new functions and a new paradigm needed for women's centers are presented to address problems with women's and gender policies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hat the functions of lifelong education, volunteer work, environmental movements, and the welfare delivery system be integrated into a comprehensive model. For this, a comprehensive network of community centers, lifelong education centers, volunteer centers, etc. is needed.

Key words: women's center, gender policy, women's welfare, lifelong education, volunteer work